이범관 국회 외통위 위원 “무국적 고려인에게 조국은 한국 법률로 지원 대책 만들겠다”

“독일과 이스라엘을 봐라
세계 흩어진 동포들 위해
매년 어마어마한 돈 쓴다”

이범관(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지원책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무국적 고려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땐 무국적 문제를 다룬 책자를 냈고, 지난달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밀집 지역 6곳을 방문했다. 법률 추진에 앞서 고려인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국적 고려인의 실태는 어떤가.

“옛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중 10%(5만여 명)가 국적이 없다. 직접 가보니 대부분 경제적 약자더라. 가난하다 보니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국적이 없다 보니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고려인을 직접 만나 본 소감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국적을 회복한 최블라디미르씨를 만났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 조국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뭉클했다. 무엇보다 옛소련 땅에 사는 고려인은 장차 한국 외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

“병을 잘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하다. 무국적 고려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로 고통 받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 그동안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방법 있나.

“우크라이나에 가 보니 고려인 마을에 ‘국적 회복을 위한 사무실’이 개설돼 있었다. 현지 고려인들이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직접 무국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국가마다 법률·문화가 다르다. 우크라이나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다. 무국적 고려인 문제가 부각되는 걸 껄끄러워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창의적 외교’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변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한국대사관의 창의적 외교 덕이 컸다. 이들은 인맥을 활용해 내무부 장관과 꾸준히 접촉하고, 고려인이 강제이주해 와 72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국민이라는 ‘역사의식’을 강조해 결국 설득시켰다. ‘자국 국민을 돕는다’는 영사 업무의 본질에 충실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 개인적 무지와 빈곤으로 불법체류자 된 고려인도 있다. 정부가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나.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적 생각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는가. 고려인들이 왜 그곳에 살게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이스라엘을 보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권익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

무국적 고려인 <하> 실태조사 나서는 한국 정부

[중앙일보] 2009년 06월 27일(토) 11면 게재

"고려인 문제는 민족사의 그늘 ... 실태파악 나서겠다"

한국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을 돕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신각수(사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 인터뷰에서 "고려인 문제는 우리 민족이 불행했을 때 나온 소산물"이라며 "무국적 고려인 지원을 위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고려인 국적 문제는 한국이 19세기 말부터 겪었던 비극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아성찰과 같다.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애국심도 가지고, 한국이 열강 틈새에서 살아남는다."

- 국적 회복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나.

"2006년에 'CIS(독립국가연합) 동포지원협의회'를 만들어 법률 자문과 농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170여 개 민족으로 이뤄졌고, 소수민족 문제에 워낙 민감하다. 그래서 직접 정부끼리 얘기하는 대신 법률 설명회를 주선했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은 무국적 고려인이 많지 않아 농업 지원에 힘을 쏟았다."

- 정부 지원이 성과를 못 거둔다는 지적이 있다.

"고려인의 원래 국적국이나 체류국과의 관계, 다른 소수민족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 사실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내정 간섭 같은 분쟁 불씨도 만들 수 있다. 일단 고려인협회 같은 민간 쪽을 적극 활용하겠다."

-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

“1단계로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엔 우크라이나 모델(한국대사관이 신분을 증명해주면 고려인 국적 회복 지원) 등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한지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

- 향후 고려인 정책의 큰 줄기는 무엇인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적 회복을 돕는 일이다. 또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국적 회복 문제가 잘 풀리면 고려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연수·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국적회복 돕고 가정 상담까지 … ‘우크라이나의 최 참판’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고려인 3대

우크라이나 남부 지방은 비옥한 흑토지대다. 농번기가 되면 많은 고려인이 평원에 임시 거처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다. 이를 ‘계절농사’라고 한다. 이들 고려인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다. 소련 붕괴 이후 국경선이 생기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무국적 신세가 됐다. 그러나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조 바라스(62·맨 왼쪽) 가족은 3대(代)가 모여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계절농사를 짓고 있다. 딸과 사위, 두 손녀, 아들, 부인이 함께 살고 있다. 아이를 위한 그네가 보인

다. 집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다.

고려인 박 블라드미르(63)는 2급 장애인이다.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작은 기업의 회계일을 했었다.

그러다 1985년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의 농업지역 헤르손으로 건너왔다. 오랜 친구가 "같이 농사 지으며 살자. 이곳 수박은 세계 최고다. 벌이가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즈베크와 우크라이나. 그땐 소련이라는 한 나라의 다른 지방일 뿐이었다. 그러나 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다른 지방'은 '다른 나라'가 됐다.

소련 붕괴 후 '구소련 여권'만 제출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93년 블라드미르는 헤르손 지방 이민청에 여권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민청의 관리가 블라드미르의 여권을 분실했다. 졸지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줄 어떠한 증빙 서류도 없는 '무국적자

'가 돼 버렸다. 그 다음해인 94년엔 친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블라디미르는 국적도 없고, 기댈 이도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마굿간 경비를 맡겼다. 여름에는 월 30여만원을 받았고, 겨울에는 끼니를 이을 수 있는 빵을 얻어 먹었다. 그러나 최근 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곧 행정소송을 통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뒤에는 헤르손 지역의 고려인협회장 조 트롬핀(61·사진)이 있었다.

2007년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밀집 지역 4곳에 '고려인 실태조사 지역사무소'가 세워졌다. 트롬핀이 헤르손의 책임자를 맡았다. 한국 정부는 각 사무소에 월 2000~2500달러를 지원했다. 트롬핀은 이민 전문 변호사, 앙케트 조사원, 일반 직원 등을 채용했다. 헤르손 지역에는 1500명의 고려인이 산다. 그 중 300여 명이 무국적자다. 이 사무소를 통해 12명이 국적을 취득했고, 47명

이 영주권을 얻었다. 100여 명이 체류 자격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트롬핀은 지역 사람들 소개로 블라드미르를 만났다. 그는 '블라드미르가 소련 붕괴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상당 기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블라드미르가 살았던 집의 임대 문서, 채용했던 사람들을 통해 20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다는 증빙 서류를 만들었다.

트롬핀은 3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땅을 할당받아 자기 농장을 일궜다. 성실함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그는 이 지역의 부농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책임지는 헤르손 지역사무소는 '무국적 고려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다. 주민 간의 갈등, 가족 문제까지 해결한다. 새벽에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김도현 주우크라이나 한국 영사는 "헤르손의 최 참판(소설 『토지』의 인물) 같은 사람"이라고 트롬핀을 설명했다.

트롬핀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일한다"고만 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잘 어울려 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취재일기] 조국은 김가이·이가이 후손을 위해 뭘 했나

[중앙일보] 2009년 06월 29일(월)

[중앙일보 강인식]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을 방문하면 꼭 나오는 음식이 있다. '카레이스키 살라드(고려인 샐러드)'. 새콤한 당근 무침이다.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이라고 한다. 반찬이 있는 식문화. 참 한국적이다. 다른 민족에게도 인기다. 시장엔 '고려인 반찬가게'가 있는데 제일 빨리 동이 난다. 카레이스키가 '옛 소련 지역에 사는 한민족'을 가리킨다면 이 음식은 괜찮은 한국 홍보를 하는 셈이다. 고려인은 대부분 한국의 성씨(姓氏)를 사용한다. 가끔 '김가이' '이가이'라는 성도 보이는데 이것도 한국 성이다. 정착 초기에 "당신 성이 뭐냐"는 질문에 "김가요" "이가요"라고 답하면서 생겨났다. 이것이 고려인이 지켜온 정체성이다.

고려인은 '100년 이산(離散)'의 아픔을 겪었다. 19세기 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많은 한민족이 연해주로 이주했다. 경제적 문제와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터를 잡은 1937년 스탈린 정부는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 그러나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민족'으로 거듭난다. 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려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국가에 살게 됐다.

모스크바에 사는 고려인 리가이 다비드(54)는 "37년 이주 1세대는 성실하게 일해 2·3세대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적지 않은 2·3세대가 1세대의 고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무국적 고려인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여러 한국 공직자를 만났다. 어떤 이는 "법적으로 보면 무국적 고려인은 불법 체류자일 뿐"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무국적 문제는 '과거의 (외교) 담론을 바꾸는 일'이다. 고려인이 그곳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고려인과 우리 국민은, 두 번째 공직자처럼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 국가를 원할

것이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국민의 후손을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 나라로 데려왔다. 미국은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군인의 유해를 세계 곳곳에서 찾고 있다. 100년 넘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고려인에게, 경제 규모 세계 13위의 모국이 해 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강인식 사회부문 기자

무국적 고려인 국적 취득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보고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범관 www.rheebk.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35호 Tel. 02-788-2381 Fax. 02-788-3535 E-mail. rheebk@assembly.go.kr